

#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?

**황운중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 
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 
ujwhang@kiep.go.kr

**문성만**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
smoon@jbnu.ac.kr

**안태현**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
ahn83@sogang.ac.kr

**김수빈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 
국제거시팀 연구원  
sbkim@kiep.go.kr

**김준엽** 티버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 
junyupkim39@gmail.com



## 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본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임.
-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(Growth Rate of Real GDP)과 내수증가율(Growth Rate of Real Domestic Demand)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음.
  - 금융위기 이전(1981~96년) 9.3%였던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03년 이후(2003~14년) 3.7%로 현저히 감소함.
  - 금융위기 이전(1981~96년)과 이후(2003~14년)의 내수성장률은 각각 8.8%와 -0.3%를 보이며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임.
- 아시아 금융위기 전후의 평균 수출증가율은 각각 12.8%와 9.5%로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.
  - 내수증가율의 급격한 하락과는 대조적임.
  - 수출증가는 금융위기 이전 GDP 성장률의 약 30%를 설명하고 있음. GDP 성장률의 나머지 70%는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설명됨.
  - 반면 금융위기 이후 GDP 성장률의 대부분은 수출증가로 설명됨.
  - 금융위기 이후 장기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으로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을 지적함.
-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의 급격한 감소는 이 기간에 나타난 내수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파악됨.
  - 금융위기 이전(1981~96년) 가처분소득증가율은 10.3%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의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은 2.3%로 매우 낮은 수준임.
  - 가처분소득증가율 하락은 소비지출을 감소시켜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.
  - 금융위기 전후의 소비증가율은 각각 8.4%와 2.4%로 가처분소득증가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임.

- 이에 본 연구는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경제변수들의 아시아 금융위기 전후 추세를 분석하여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
## 2. 조사 및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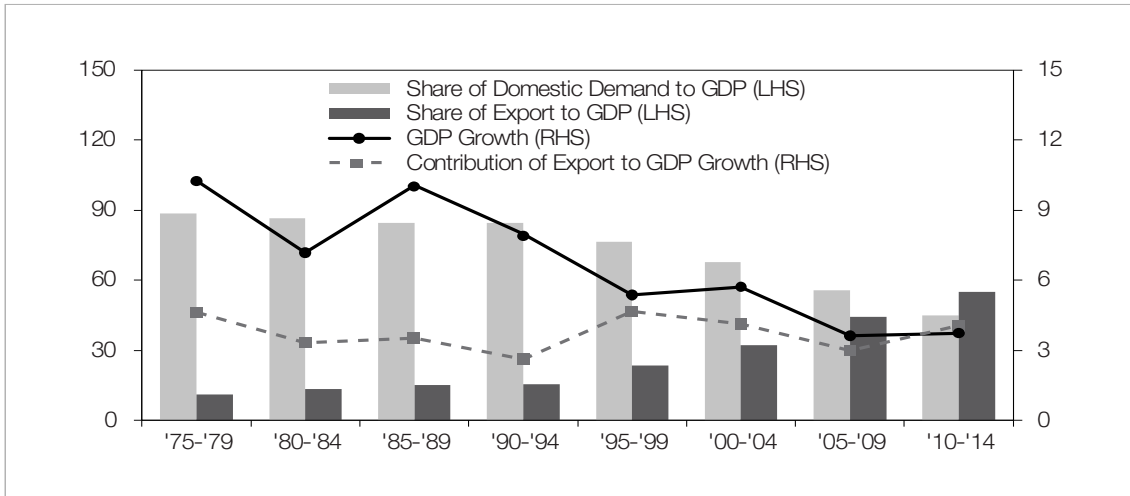
### 가.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(Dampened Ripple Effects from Export Sector)

- 국민계정식( $Y = C^d + I^d + G^d + EX$ )<sup>1)</sup>을 이용하여 GDP 성장률을 내수(Domestic Demand)와 수출(Export)로 분해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 GDP 성장률의 약 70%는 내수성장률로 설명됨.<sup>2)</sup>
-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관측된 GDP 성장률의 대부분은 수출성장률로 설명됨.
  - 이는 금융위기 이후 내수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.
-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에 대한 구조적 원인으로 수출 대기업의 투자행태 변화를 지적함.
  - 금융위기 이전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국내투자(설비투자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발투자)는 생산성증가 및 고용증대 등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의 원동력이 됨.
  - 반면 금융위기 이후 수출 대기업의 해외투자(해외 설비투자 등) 증가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로 인한 수입중간재 의존도 증가는 국내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져 내수부진의 원인이 됨.
  - 금융위기 전후의 투자성장률(Growth Rate of Investment) 추이는 GDP 성장률 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.

1)  $Y$ 는 GDP,  $C^d + I^d + G^d$ 는 국내생산에 대한 국내수요(domestic demand on domestic production)를 의미하며  $EX$ 는 국내생산에 대한 외국의 수요, 즉 수출을 의미함.

2) [그림 1]에서 보이는 두 실선의 차이는 내수의 경제성장률 기여도(contribution of domestic demand on GDP growth)를 의미함.

그림 1. GDP 성장률 및 수출의 GDP 성장률 기여도



자료: European Commission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.

## 나.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의 감소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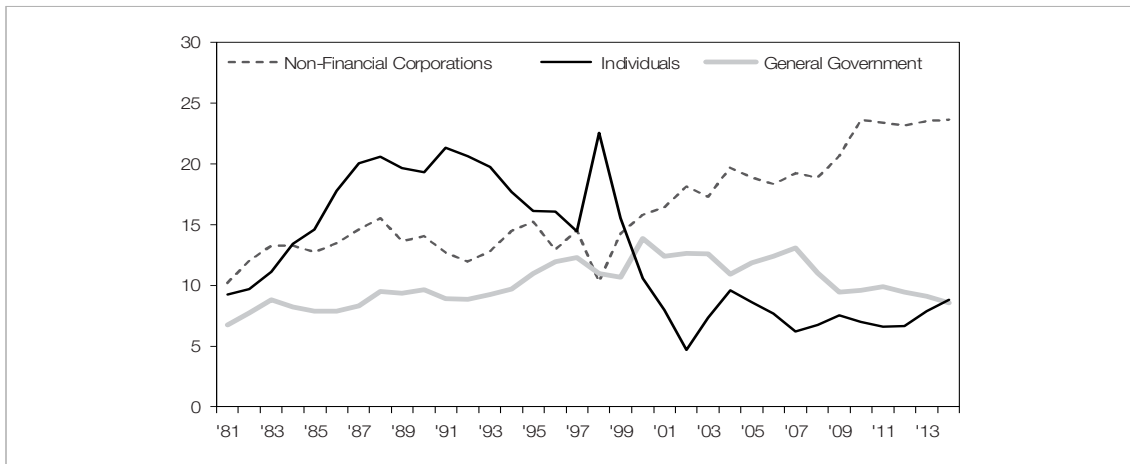
●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소비와 저축이 동시에 감소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으로 가처분소득증가율의 감소를 들 수 있음.

- 금융위기 전후의 가계 소비증가율은 각각 8.4%와 2.4%로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함.
- GDP 대비 가계저축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현저히 감소함.
- GDP 대비 기업저축(Non-financial Corporations Saving)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함.

●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(영세 자영업자, 비정규직,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)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.

-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은 가계 전체의 가처분소득증가율을 감소시킴.
-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(정규직 근로자의 약 70~80% 수준)은 가계 전체의 가처분소득증가율을 감소시킴.

그림 2. GDP 대비 저축의 비중



자료: 한국은행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.

#### 다.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 생산성 간 상관관계 분석

-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의 생산성, 더 나아가 내수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 생산성 간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함.
  -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전체 고용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약 17%에서 2006년 29%로 가파르게 증가함.
- 기업수준의 자료(Korea Workplace Panel Survey)를 사용하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효과를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통해 실증분석함.
  -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의 생산성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.
  -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 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,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.

## 라. 영세 자영업자의 높은 부채부담과 소비행태

-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 가구의 낮은 소득과 높은 금융부채 비율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, 자영업 가구의 소비행태가 임금근로 가구와 어떻게 다른지 실증분석함.
  - OECD 자료에 의하면 1999년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36.8%로 OECD 평균(20%)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 -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(2011년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6.1%, 한국은 28.2%).
  - 국내 자영업자 비율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(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09년대비 10.4% 증가).
- 한국노동패널 자료(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)를 사용하여 자영업자의 금융부채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.
  - 임금근로자의 경우 금융부채와 소비지출 간 양(+)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,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부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.
  - 사업자금 마련 등으로 높아진 부채부담이 자영업자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.
  -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 가구의 높은 부채비율이 소비제약으로 이어져 전체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.

## 3. 정책 제언

### 가.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제고 전략

-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장기 내수침체는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.
  -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의 원인으로 수출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투자 감소, 수입중간재 의존도 증가 등을 들 수 있음.

- 따라서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대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  -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기업의 투자촉진정책(설비투자 및 R&D 투자) 마련이 필요
  - 특히 기업가정신(Entrepreneurship)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, R&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, 고부가가치 신산업(친환경 자동차, 스마트 그리드, 3D 프린팅 등)에 대한 R&D 투자 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,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됨.
- 국내 중견·중소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(Global Value Chains)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.
  -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관련 환경개선(조세환경 등), 규제완화(제도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 등), 노사관계 안정 등의 정책이 요구됨.
  -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 등 중견·중소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# 나. 가계의 가처분소득증가를 통한 내수 활성화

-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한 가계 가처분소득이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됨.
-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가 차원의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음.
  -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(임금)수준을 보임.
  - 은퇴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.
  -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이고 동시에 소득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 -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매칭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.
  -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.

## 다.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확대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가계 소득 개선

- 기업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기업생산성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.
- 정규직 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확대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조
  -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 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.
  -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제고를 통해 가계 소득의 개선효과가 기대됨.